

2019년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I

회의개요

회의명	◦ 2019년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일 시	◦ 2019. 12. 3.(화) 15:00~17: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20명 ※ 대리참석 4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건리(공동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상학(공동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 박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운영관리팀장 이민형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조양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부장 한은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양세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양철승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양윤석
		여성신문 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 신준철	한국부패학회 연구위원장 이정주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강건구
		한국행정연구원 경영부원장 안혁근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 박현규
		중소기업중앙회 청렴문화팀장 김영길(代)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경영팀장 최문석(代)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공영제 추진팀장 구의청(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김영아(代)
	◦ 불참위원 : 8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담	한국윤리경영학회 사무국장 구자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담당부장 김수희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심재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은영	내부제보실천운동 대외협력위원장 전경원
	◦ 경제분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호영	JP캐피탈 박영기
	◦ 정치행정 분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회의명	◦ 2019년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결과	◦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 경제단체 입장 조율 후 민관실무협의회에 재상정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보고 안건	◦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경과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개편방안
심의 안건	◦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 경제단체 입장 조율 후 민관실무협의회에 재상정 - 제안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자산 2조원, 1천억’ 등의 내용은 상법 개정 논의 사항 등으로, 입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제안으로 보여져,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임. - 제안문 내용 중 각 분야 별로 반대할 수도 있으나, 전문성, 독립성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됨. 즉, 정보공시 등을 통해 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전문성,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파악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됨. → 제안문 1, 2번 사항에 대해서 전문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나와 법제화 내용은 최대한 제외하고 제안문을 설정하였음. → 어떠한 제도든 새롭게 강제화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나, 제안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하지 않음. - 외국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문성 부분보다는 필요성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상장기업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상근 감사가 있는 지원부서 설치 관련 필요성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됨. - 대폭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내년 시행 예정으로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충격이 크므로, 개정법 정착이후 천천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회의명	◦ 2019년 제4차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기업은 사적 자치가 중요하나, 상장 기업의 경우 사적자치 뿐만 아니라 공적 통제도 필요하며, 외부감사제도가 있지만, 내부감사제도가 활성화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제안문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지만, 제안문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내용으로, 청렴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인식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이라고 하면 상당 수의 중소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중소기업에 지원 부서 설치를 의무화하여 관리성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투자 활동 비용 등이 위축될 수도 있음. ◦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 수정 동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에 상정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이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윤리규정(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그러한 자료 등이 있으면 제안문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제외하고 의원 윤리규정(법)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국회의원 관련 행동강령 관련해서는 이해 충돌방지법, 국회윤리법 제정 등에 대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제안문에서는 내용을 제외함. - 제안문 내용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여성의원 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의원 참여 기준 설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원 징계 문제(성희롱 발언, 성폭력 관련 등)에 있어서 여성의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문에 있어서는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 수정하겠음.